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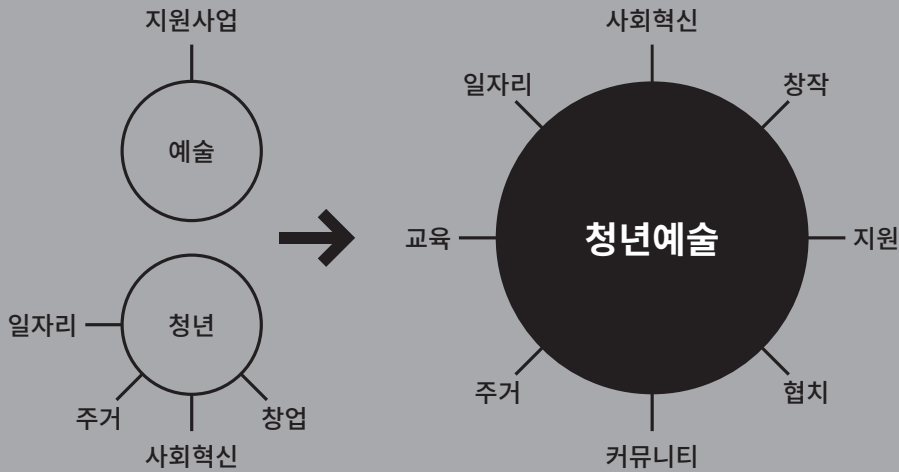
2018 청년예술
6대정책



문화연대가 바라보는 '청년 예술' 정책

'청년'과 '예술'이라는 두 개념의 교집합으로써의
도식화된 청년 예술이 아닌,

'청년 예술' 그 자체의 독립성과 주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기본방향과 배경

- 매년 수만 명의 예술전공 대학생이 졸업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열악한 창작환경과 공정한 예술 활동의 기반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예술현장에 이제 막 진입하거나 혹은 예술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
- '청년 예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청년예술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 형성

01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제도화

02 청년 예술인 관련 생활·창작 환경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03 청년 예술인의 지원사업 진입 장벽 완화와 개선

04 청년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방안 마련

05 청년 예술인의 성평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수립

06 청년 예술인과 지역문화 연계 지원사업 활성화

01.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정책 수립 · 집행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제도화

1. 취지와 배경

- 청년 주체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청년 정책의 대다수는 노동 · 일자리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청년 예술인에 대한 고민과 접근은 매우 부족함
- 예술창작 활동의 특수성과 창작물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정책 수립 필요
 - 청년 예술인 정책과 지원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고려되어야 함
- 문화정책과 지원 사업 · 심사제도 마련에 청년 예술인 당사자 직접 참여 필요
 - 청년 예술인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 제도 마련

2.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청년)예술정책은 예술 노동 · 일자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음
 - 예술창작 과정에 대한 특수성은 부재
-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청년 예술인 당사자성 부재 · 결핍
 - 제도적으로 정형화된 전문가 집단(중장년 남성, 교수 및 지식인 등)에 의한 독점 구조 형태
- 지원 사업 심사 과정에서 청년예술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 받는 구조를 반복
 - 지원 사업의 협력 주체가 아닌 지원 수혜자로 대상화
 - 지원 취지와 달리 결과만 받아들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로 위치 지어짐

• 심사정보의 불균형과 격차

- 절차의 불투명성, 선정 후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 부재
- 심사 결과에 따른 총평 근거가 미약, 명료하지 않음

3. 제안내용

- 문화예술 관련 법령(조례) 위원회에 청년 예술인 참여보장 쿼터제 도입(30%)
- 청년 예술인 관련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시 청년 예술인 참여보장 쿼터제 도입 (50%)
- 기관별, 사업별 청년 문화예술 정책 및 심사제도 모니터링단 구성

02. 청년 예술인 관련 생활 · 창작 환경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1. 취지와 배경

- 창작물 구상 과정 또한 예술창작 활동이라는 인식 필요
-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과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사 필요
 - (창작 과정의 배경이 되는) ‘기본 생활과 창작 환경’ 실태 파악 우선
- 2015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예술 활동 및 생활 부문’에 따르면,
 - “경제적 능력에서 한계를 느낀다”는 응답이 62.1%
 - 예술 활동 수입별로는 1천만원 미만 71.5%, 권역별로는 서울 77.2%,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69.1%로 가장 많음
 -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예술 정책으로는 “경제적 지원”(43.3%)을 꼽음
-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예술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2015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 ‘행복감’은 예술 활동 수입별로 1~2천만원 미만 56.7%, 2천만원 이상 55.9%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0.9%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우울감’에서는 권역별로 서울 16.7%,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0.4%, 예술 활동 수입별로 1천만원 미만이 11%로 가장 많았음(‘행복감’과 ‘우울감’이 수입과 연관되어 있음. 그런데 예술 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얻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음)
- 구체적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
 - 단순 데이터만 나열(수치와 도표 중심)
 - 데이터에 대한 설명 미흡(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한계)

- 과정이 배제되고 결과와 성과(결과물/창작물)에만 집중된 지원 사업이 대다수임

3. 제안내용

- 지역별, 권역별 청년 예술인의 생활 · 창작 환경 실태 조사 추진 및 정례화(격년)
- 월평균 소득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비나 작업비(작업실 임대료, 재료비 등) 지원을 위한 정책 · 제도 수립
- 지원 사업 지원 시, 기획과 구상이라는 과정의 단계 또한 창작물의 개념으로 포함하여 과정에 대한 사업비 책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구조 혁신
- 청년 예술인의 생활 및 창작 조건에 따른 선별적 · 보편적 지원 및 평가 체계 필요

03. 청년 예술인의 지원사업 진입 장벽 완화와 개선

1. 취지와 배경

• 예술창작 활동이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기회라는 인식 마련

- 성과주의 탈피, 사회적 변화의 기틀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사업 필요

• ‘소수 분야’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창작 환경 실태 조사

- 대중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예술이론, 비평·기획 활동에 대한 지원이 타 장르에 비해 양적으로 미흡

• 대학생 신분으로 인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 개선

• 단체 법적 증빙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제도 완화 혹은 상황에 맞게 사안을 다르게 적용 필요

2. 현황과 문제점

• 문화시설, 공공 공간 같은 지원 시설 미비

- 해마다 예술 전공 졸업생 수 증가(예술계 청년예술인 인구수 과잉)
-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통해 창작환경 조성

• 문화예술인의 작업 조건(예술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

- 사업수행기간에도 인건비 지급이 필요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1인 창작자나 소규모 창작 그룹을 지원하는 제도 미흡

- 비평·기획 지원사업은 특정 장르에만 집중됨(시각, 문학)

• 개인 활동을 희망하는 예술가들의 지원 기회 적음(형평성 고려 필요)

• 단체 법적 증빙서류 발급의 어려움

-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증빙서류 발급여부 결정됨
- 예술 단체 의지와 무관, 단체 법적 증빙서류 발급 애로사항 발생

3. 제안내용

• 상상력, 실험 그리고 실패를 존중하는 지원사업 제도 도입

- 기관 중심 지원 양식 개선, 청년 예술인 실태와 현황에 맞게 양식 재구성
- 청년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지원사업 기획

• 생활·창작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이를 반영한 기초 생활 지원

-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작 과정별·단계별 지원 체계 구체화 및 확대

•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 대학 재학생 포함

• ‘소수 분야’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소수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 문화예술이론 전공생들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련 실험·기획 지원제도 도입

• 단체 인증제도 완화 : 서울시청년허브 2018청년활 지원사업 구조 및 조건 참고

• 1인 예술창작인 지원 제도 확대 :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인지원’ 사업 참고

04. 청년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방안 마련

1. 취지와 배경

• 기존 문화예술시설의 진입장벽으로 예술창작 활동이나 발표회, 유통 등 무리

• 예술인 · 기획자 등 당사자가 복합문화예술공간 운영

- 소규모로 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
- 예술창작 활동이나 발표 용도

• 발표 중심의 공간 확보

- 지역과 협력하여 공간 마련 필요
- 발표 기회 확대, 지역 문화 활성화 영향

• 1인 창작자 공급은 증가하나 지원은 미흡

- 공공시설 · 공유지 내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와 지원 확대 필요
- 예술이론이나 비평 · 기획도 예술창작 활동으로 인식(연구 · 독립 공간 지원)

2. 현황과 문제점

• 공간 지원사업 신청 자체에서부터 발생하는 진입장벽

- 단체 법적 증빙자료는, 임대인 승인 필요
- 발급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발생

• 지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기적 이주

-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는 예술창작 활동 어려움
- 공간 임대료 및 대관비 충당을 위해 비예술 경제활동 강행
- 저렴한 임대 공간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주

• 지역 특성 고려한 공간 지원 사업 부재

- 장르별 특화된 공간이 지역별로 집중 : 대학로-소극장, 홍대-공연장, 문래-다원예술창작 공간 등

3. 제안내용

• 지역 내 공공시설 · 공유지 ·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 조사 필요

• ‘서울청년예술인지원센터’(광역) + ‘구단위 청년예술인지원센터’(기초) 마련

- 청년 예술인 활동 전반에 대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점에서의 지원 환경 형성
- 청년 예술인 관련 레지던시 및 창작 · 발표 공간 활용
- 청년 예술인들의 공간 정보 취합 · 교류

• 청년예술 관련 공간 조성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정책 · 제도 마련

• 공간 지원사업 증빙서류 완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05. 청년 예술인의 성평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수립

1. 취지와 배경

- 문화다양성 인식을 전제로 한 포괄적 범위의 문화정책 필요
 - 성별에만 국한된 성평등 인식 개선 필요
 - 나이, 인권, 성적지향, 젠더 등과 같은 소수자 문화다양성 인식 마련
- 청년 예술에서 소수자성(퀴어 · 젠더)과 관련한 정책 논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는 경향이 있음
-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년 남성을 비롯하여 기득권 계층이 다수를 차지
 -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성평등 · 성폭력 항목 부재
 - 이에 대한 항목과 내용을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내 청년 여성 예술인 성평등 침해 사례 다수 발생
 - 교내 성평등 기구, 신고센터 제도적 지원 필요(기능 강화)
- 청년 예술 정책에 대한 ‘성평등 문화 백서’와 같은 보고서가 필요

2. 현황과 문제점

- 청년+예술인+성소수자(퀴어 · 젠더)에 대한 개념을 밀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제도와 정책
- 청년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인 당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 안에서 권력형 · 비권력형 불평등을 경험하지만, 해결에 대한 매뉴얼이 실효성이 없거나 예술계 · 장르별 특수성 때문에 공론화가 어려움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 반영 여부
 - 성평등 · 성폭력 항목 없거나 의미 축소

3. 제안내용

- 청년예술 정책 관련 성평등 · 성폭력 모니터링(실태조사) 제도화
 - 이와 관련하여 (가칭)청년예술생태계 성평등문화백서 등의 결과보고서 발간
- 청년 퀴어 예술인, 소수자 예술 정책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 청년예술생태계 내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마련
- 예술대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피해자 지원제도 수립
- 예술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예술교육 제도화

06. 청년 예술인과 지역문화 연계 지원사업 활성화

1. 취지와 배경

• 지역문화생태계 기반 마련, 시민 주체 형성 전략 수립

- 일상과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필요

• 생활문화 · 생활예술의 중요성 대두

-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공감과 지지 확보

•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주체로 부상하는 청년 예술인과 협력 · 활동 지원 필요

• 대학 구성원들의 경우 지역을 대학가의 주변 정도로만 인식

- 수많은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예술가로 등장

- 임대료 부담 등으로 대학 인근 지역을 벗어나 자리를 잡는 경우 발생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에서 진행

- 14개 대학이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

-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과 연계된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

2. 현황과 문제점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공간의 불안정성

- 지역에 청년 예술인들이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을 가질 여유가 없음

• 청년 예술인이 결합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된 공공적인 일거리 ·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재

• 장르별로 특화된 공간이 극히 소수의 지역에 밀집 :
홍대-공연장, 대학로-소극장 등

- 청년 예술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

• 공공공간이나 예술인주택과 같은 특성화 공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거나 입주 경쟁률이 높은 편

• 기존 캠퍼스타운 정책은 다분히 청년 창업에만 집중된 경향

- 청년 예술인 정책은 부재함

3. 제안내용

• 청년 문화예술 공간과 지역 간 연계 활동을 위한 정책 수립 :
연구 · 추진단 구성

- 청년 예술인이 연구 · 추진단 주체로 참여하여 당사자성 및 협치 기반 확보

•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의 일거리, 일자리 확보

- 문화예술교육강사 채용 제도화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연계하여 추진

- 지역문화생태계를 매개로 지역자원(문화예술 관련 단체 · 기관 등)과 예술대학생(졸업생 포함) 연계 사업 활성화

•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 · 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예술인 지원

- 창작 및 발표 공간 확보 : 예술창작 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

- 도시재생(문화재생) 사업과 청년 예술인 일자리 · 일거리 사업 연계

발행일

2018.05.21.

기획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디자인

파이카, pa-i-ka

paika.org

연락처

02)773-7707

홈페이지

www.culturalaction.org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ulturalaction

페이스북 그룹

www.facebook.com/groups/culturalaction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910003-12804

(예금주 문화연대)

